

# 목차

---

**사 회**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개회사**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발 제**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한계                    03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일본사례 중심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                    27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

**좌 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토 론**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7  
                        한승현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39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41  
                        배기택 이락건축사사무소 대표                            43

## **발제1**

#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한계**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2차 토론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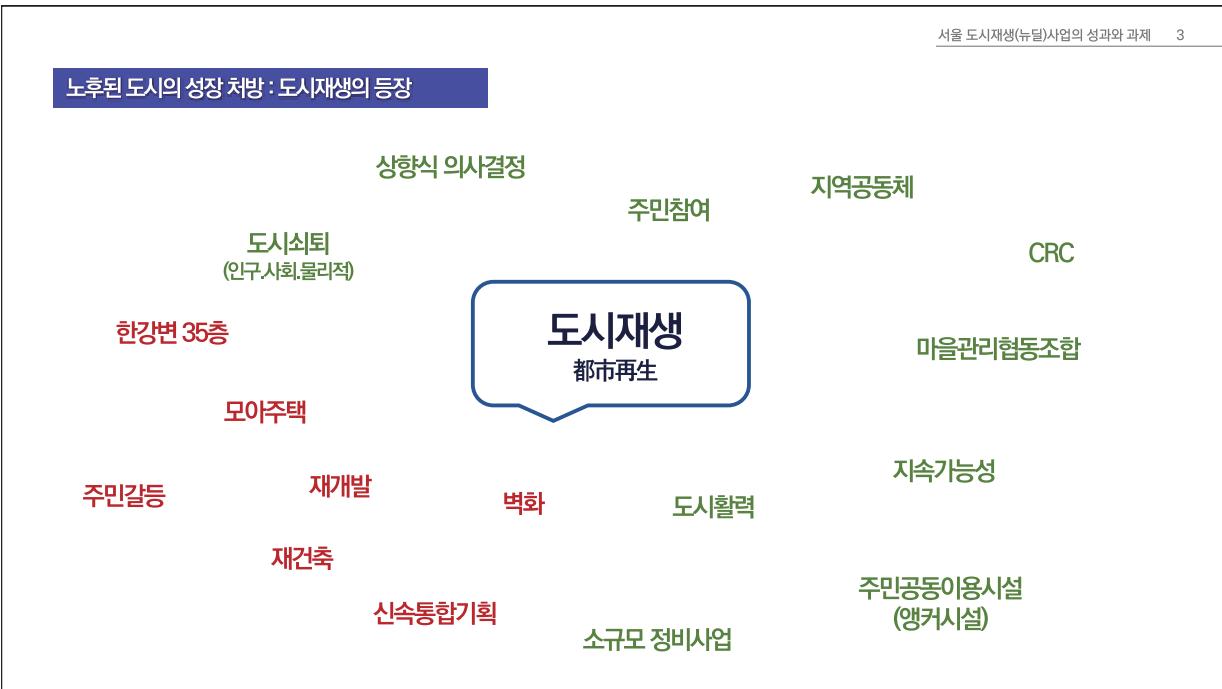
##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백해영



## 노후된 도시의 성장 처방 : 도시재생의 등장

## 노후된 도시의 성장 체방 : 도시재생의 등장



## 노후된 도시의 성장 체방 : 도시재생의 등장

**도시 활력을 회복을 위한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도시재생”**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출산 시대로 돌입으로 도시문제 발생 → 기존 도시관리 방식의 대안 필요성 증대

## [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흐름 ]



## 서울의 도시재생 : 다양한 도시관리 수법의 도입

##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2012년 정비사업 부작용 해결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며 도시재생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 전환



##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기반: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통한 도시재생 제도적 실행 기반 구축

\* 이하 '도시재생 특별법'

## [ 도시재생 특별법 주요내용 ]

- 목 적 : 도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 도시 경쟁력 제고 + 지역 공동체 회복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특별법 제2조 제7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 주요내용
  - 도시재생 추진체계 설치 방안(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내용
  -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기반 :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미와 한계

### 도시재생특별법의 의미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근거 마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내용 및 처리절차를 명시
- 주민참여, 지역니즈가 반영되는 민관 도시관리 방식 전환

#### 지속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정 이후 구역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속적 연계사업 우선 적용 가능

### 도시재생특별법의 한계

#### 도시재생 추진주체별 역할 명시 한계

- 전담조직-광역센터-현장센터 간 명확하지 않은 역할 구분

####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위별 개별법 적용

-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은 공유재산법? 도시재생법?
- 주민자생조직은 마을기업?
- 특별법 상 도시재생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사업
- 최근 국토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 개별법령 상이

#### 도시개발사업? 지역 가치 보존?

- 혁신지구 등 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
-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취급 가능한 것인가?

서울, 도시재생의 시작

## 서울의 도시재생 : 도시쇠퇴가 진행 중인 서울

## 사회, 경제, 물리적 측면의 도시쇠퇴 진행

노후한 물리환경과 인구, 산업 등 도시환경 쇠퇴에 따른 도시의 지속기능성 확보 방안 필요

## 인구사회



- 사회취약계층 증가
- 인구감소 지속
- 고령화 사회 진입

##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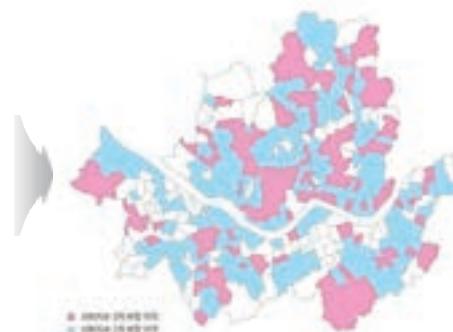
- 사업체 수 및 일자리 감소
- 경제성장을 저하
- 투자 감소

## 물리환경



- 생활편의시설 부족
- 주거환경 악화
- 관리비증 증대

[ 서울시 쇠퇴지역 분포(2013년 기준) ]



서울시 432개 행정동 중

322개 행정동, 약 76.1%가 쇠퇴지역

- 저층주거지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약 72%(2015년 기준)
-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약 83%

\* 쇠퇴지역 : 쇠퇴기준 3가지 중 2가지 이상 부합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기준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기준 2. 사업체수 감소 등 산업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기준 3. 노후주택지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서울 도시재생의 시작, 3+5지역

## 2014년 서울시 최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정비사업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토산산업 쇠퇴지역 등 8개소(3+5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2014년 서울시 미래 도시주거재생비전 발표에 따른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진행
- '3+5지역'이란?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3개소(2014년 2015년)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5개소 (2014년 12월) → 서울 유일 마중물사업 종료 지역

## [ 3+5지역 개요 ]

유형	지역	사업기간	면적	지역특성
국가지원· 서울형	창신승인	2014~2017	830,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타운 해제지역(2013년 10월) / 노후 주거지역</li> <li>• 동대문 패션 산업 배후지역 → 봉제·의류산업 쇠퇴</li> </ul>
	가리봉	2016~2020	332,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역</li> <li>• 옛 구로공단 배후지역 / 종곡동포 밀집 거주지역</li> </ul>
	해방촌	2016~2020	332,4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산업 밀집지역</li> <li>• 미군부대 위치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li> </ul>
서울형	성수동	2014~2019	886,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산업 혼재지역(대상지 약 80%가 준공업지역)</li> </ul>
	장위	2014~2019	318,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타운 해제지역(2014년 11월)</li> </ul>
	신촌동	2014~2018	43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가 상권지역(연세대, 이화여대의 2개 대형 대학상권 입지)</li> </ul>
	상도4동	2014~2019	726,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재개발 해제구역</li> <li>• 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대표적 특성 보유(좁은 골목길, 노후 저층주택 등)</li> </ul>
	암사동	2014~2019	635,8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li> </ul>

## 서울 도시재생의 시작, 3+5지역의 의미와 특성

# 3+5지역의 사업 경험을 통한 서울형 도시재생 기반 정비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제도 개선, 준비단계사업 필요성 확인, 거버넌스·참여의 역할 중요성 인식 확대 등

### [ 3+5지역의 의의와 성과]

#### ① 서울형 도시재생의 추진기반 마련

- 서울시에서 최초로 진행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3+5지역 사업의 경험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협치, 협력 기반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모델 구축, 지원 기구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추진체계 구축

#### ②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방향성 제시

- 준비단계사업(희망지사업 등) 마련 필요성 인식 계기
-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의 기초**

#### ③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 필요성 확인

- 지역 상황에 맞춘 사업 추진과 유연성으로 다양한 실험 가능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중요성 확인**

#### ④ 사업 추진 과정의 중요성 강조

-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고려 → 공동체를 통한 주민참여 경험으로 도시재생 진행
-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활동의 중요성 인식 확대** 계기

## 서울 도시재생의 시작, 3+5지역 사업결과(사진)

### [ 상도4동. 자율주택정비사업 ]



\* 노후불량주택 밀집, 자루형택지로 신축 및 환경정비가 어려운 지역

\*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여 고시  
\* SH 공사 PM방식, 주민합의체-SH공사-동작구-화성시 업무협약 체결로 4년 만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완료

### [ 가리봉.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



\*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노후주택 밀집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높은 주민 니즈 확인  
\* 250m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건물 외관 디자인 통일, 경사로 정비, cctv 설치, 그린파킹존 조성 등)

### 서울 도시재생의 시작, 3+5지역 사업결과(사진)



\*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서울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2022년 3월 기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8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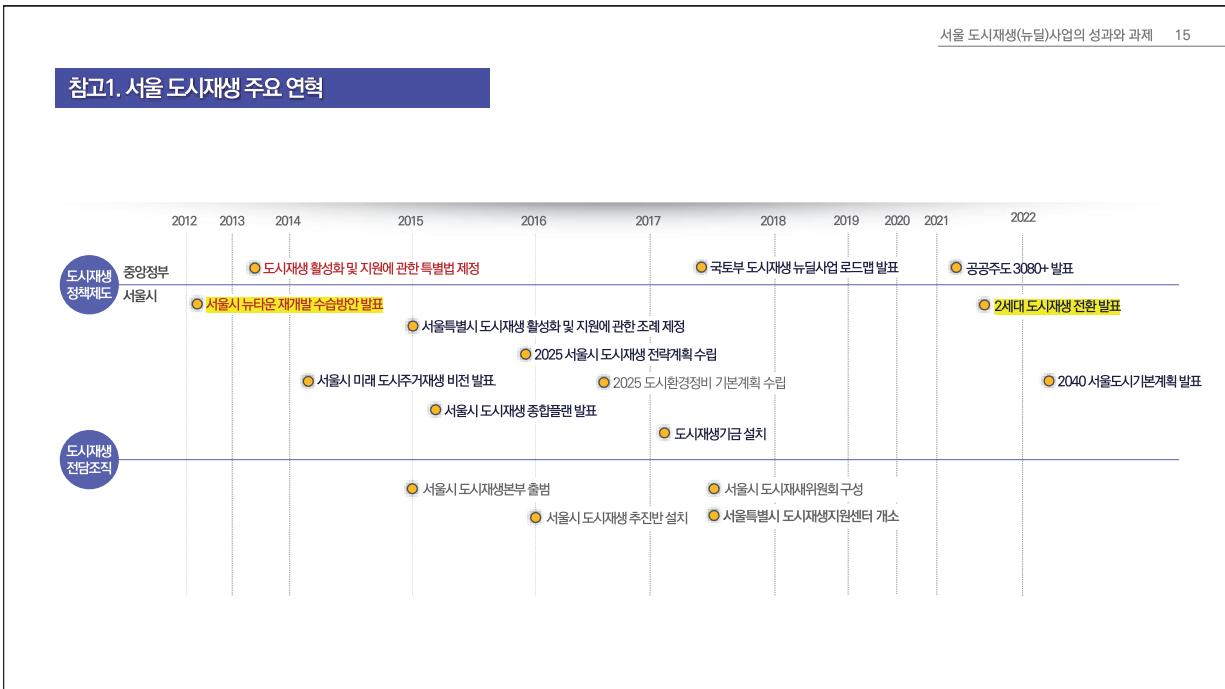
주거환경개선사업 86개, 골목길재생사업 46개 등

**총 232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 58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지역별 현황 확보현황(지역별 현황)	
● 경제기반형	19개소
● 문화서리지역형	19개소
■ 주거환경개선형	20개소
▲ 주거환경개선형	10개소
■ 문화교류와 도시재생사업연계, 정부·민관 협력형	14개소
<b>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 58개소 (한글)</b>	
● 경제기반형	19개소
● 문화서리지역형	19개소
■ 주거환경개선형	20개소
▲ 주거환경개선형	10개소
■ 문화교류와 도시재생사업연계, 정부·민관 협력형	14개소



### 참고1. 서울 도시재생 주요 연혁



## 서울 도시재생의 특징과 성과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전담조직의 설치, 조례제정, 광역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

-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의 제도정책 마련
  - (2012년) 뉴타운 수습 및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서울형 도시재생의 도입 준비
  - (2014년) 서울시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 발표(서울형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도시재생 비전, 추진전략 등)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 도시재생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조성
  -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 출범(2015년 1월) →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반 구성 (2016년 1월)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2017년 7월)**
  - 행정(서울시, 자치구, 도시재생위원회 등)~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 현장)~주민기구(SH, 서울연구원)~주민(지역조합, CRC 등) 간 민관상생협의회 구성하여 도시재생 실행주체간 상행협의회 운영(2018년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반영)
- 서울 도시재생 운영 프로세스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
  - 2015년 4단계(준비단계 → 계획단계 → 실행단계 → 자력재생단계)에서 2018년 3단계(거버넌스 및 구상단계 → 계획 및 실행단계 → 자력재생단계)로 개편
  - 도시재생사업으로의 다양한 입출구 사업 연계 가능
- 전국 최초 도시재생기금 절차 및 운영(2017년)
  - 원활한 재원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재개발 후유증 회복과 공동체 회복 거버넌스 강조



“우리의 ‘이웃’, ‘사람’, ‘삶’을 중심에 놓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활용하며,  
경제·사회·문화·안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야 합니다.”

2012.01.30.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2014.02.26.  
기본방향 설정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 발표

2015.01.01.  
조직과 제도 마련  
도시재생본부 설치  
도시재생조례 제정  
시범사업 착수

2015.03.10.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전국 최초 희망지사업의 도입

## • 전국 최초 도시재생 준비단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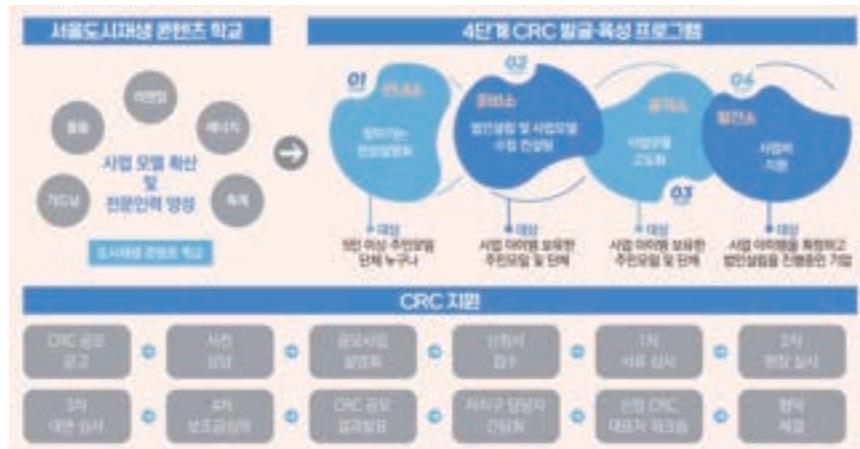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전 주민공동체 강화, 지역조사 등을 위한 준비단계로 '희망지사업', '희망돌음사업' 도입(2016년)
-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대상의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으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2017년)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후속사업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동 단위로 사업 추진(2019년부터 변경)
- ⇒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타지역의 준비단계 사업으로 전화 영향



구분	도시재생 예비사업	희망지사업
목적	뉴딜 본사업 신청 전 뉴딜 이해도 제고 및 주민역량강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연계를 위한 준비단계로 주민역량강화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대상지	활성화지역 지정요건 ①활성화지역 ②쇠퇴도 충족을 갖춘 지역	활성화지역 지정 예정지역으로 도시재생 쇠퇴요건에 부합하는 지역(행정동 단위)
사업주체	주민조직+지원기관(센터) (사업시행: 자치체)	주민모임(자치구 지원) (사업시행: 서울시 광역센터)
지원기간	사업별 1년(단년도 사업)	사업별 1년(단년도 사업)
수행기간	2018년 ~ 현재	2016년 ~ 현재
선정절차	①주민제안→기초·광역 지자체 ②지자체 공모신청(→국토부)	①주민모임+자치구 신청(→서울시)
추진방식	기초·광역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사업비 진행	사업주체는 주민모임·주민모임 활동 지원과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은 광역센터 용역 시행
사업내용	〈H/W〉 공동체가짐공간, 공유체험방, 공동육아방, 골목길 정비 등 〈S/W〉 공동체 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경제조직설립, 상생협약서, 소식지, 마을지도, 운영프로그램 등	〈주민모임〉 현장가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센터운영①〉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센터운영②〉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지역맞춤 교육, 인적자원 조사, 협업체계 구축 등)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마중물 사업 이후를 위한 CRC 지원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집수리 가꿈주택지원사업의 성과

집수리 지원체계  
구축 및 관리

- 5개 지역집수리 지원센터(강북, 관악, 서대문, 은평, 중랑) 10명 집수리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체계 고도화
- 집수리 이력업무 효율 제고(21년 컨설팅 6,300건 이상)를 위한 [집수리지원 업무플랫폼](#) 운영([www.s-hims.co.kr](http://www.s-hims.co.kr))
- 집수리시공업체 등록제 운영(신규 등록 200곳 목표)

집수리 이해관계자  
역량강화교육

-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직무교육 연 4회
- 집수리시공업체 교육(공공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교육 10학+기술교육 5회)
- 집수리지원인력 직무교육(50+재단 연계 집수리 상담인력 10명)

집수리 컨설팅 17,067 건

집수리 지원 5,954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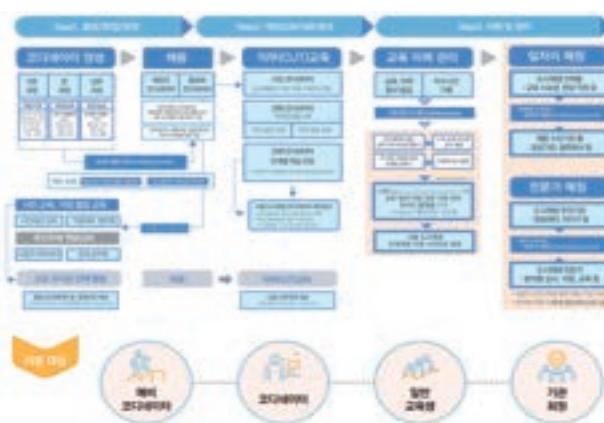
전국 최초 집수리 지원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주민 체감도 충진 및  
소규모 집수리 시장  
활성화 제고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00년대 중반으로 확장화 영향'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전국 최초 도시재생 인적자원 관리 → 일자리 연계



##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입과 현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현황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과제 24

###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의 플랫폼 제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발표를 통한 도시재생 방향 구체화 및 사업 형태 다각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및 추진 과제】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목표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추진 과제

•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 정비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 쇠퇴 구도심에 혁신거점공간 조성 • 도시기능 재활성화 • 도시경쟁력 회복
--

•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이의 선순환 구조정착 • 소유주, 임차인, 사업주체, 주민간 상생유도
---

•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 제공 •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기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신예적 대응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현황

##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534개소 추진 중

사업유형 다각화, 특화사업 도입, 사업 제안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도시재생 유형 확대 지원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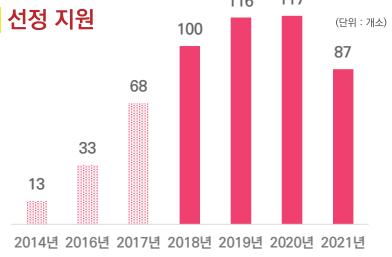
구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기자형	경제기반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상지역	소규모시중 주거밀집지역	지중·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 준주거지역	상업·역사·자연상권	산업·자본경제
면적규모	5만㎡이내	5만~10만㎡이내	10만~15만㎡이내	20만㎡이내	50만㎡이내
국비지원 (집행기간)	상한50억 원(4년)	상한100억 원(4년)	상한100억 원(4년)	상한150억 원(4년)	상한250억 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거장·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생활편의시설등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 [ 년도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 선정지원을 시작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입 이후

## 매년 100개소 내외 선정 지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범위 혼란

주민, 행정, 전문가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출발

사업성과 평가 기준 미흡 : 예산집행률 중심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진행 등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매뉴얼 – 사업기간 고려 필요 등

다양성이 사라진 일괄된 계획

점차 모호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성

## 흔들리는 도시재생

(부동산과 도시재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도시관리 정책으로의 변화**

## 주택공급, 정비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발표

2021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 도시정책도 물리정비 중심 도시재생으로 변화

[ '공공주도 3080+' 주요내용 ]

- 목 표 : 신규주택공급부지 확보 및 임대주택 공급
- 추진전략 : 新 도시개발 모델 도입, 재생사업·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시구조 개편 및 주택공급 확대
-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 재개발, 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 신규 가용지(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 '공공주도 3080+' 중 도시재생 관련 사항 ]

- 목 표 : 도시재생사업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확대 → 노후 주거지 기능 개선
- 추진전략 : 도시재생사업 + 정비사업 연계를 통한 주택공급
- 대상지역 : 도시재생사업지역 + 인근지역
- 계획 : 5년간 총 3만호 주택 공급 (서울 0.8만호 / 경기인천 1.1만호 / 지방광역시 1.1만호)

구분	주요내용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취약지역에 주거, 복지, 생활편의 개선 조성</li> <li>제한적 수용방식 적용 (토지면적 2/3 + 주민 2/3 동의)</li> <li>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기반시설 설치에 국지 지원</li> </ul>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등</li> <li>국비지원 증액(+ 50억~100억)</li> <li>탄력적 사업기간 적용 (정비사업 연계시 5년 이상 연장 허용)</li> </ul>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지역내 주택사업 인정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지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성화계획 의제 확대(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li> <li>혁신지구와 중복 지정되는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제한(20% 미만) 폐지</li> </ul>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도시관리 정책으로의 변화**

## 도시재생+정비사업의 2세대 도시재생 전환 발표

2021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 도시정책도 물리정비 중심 도시재생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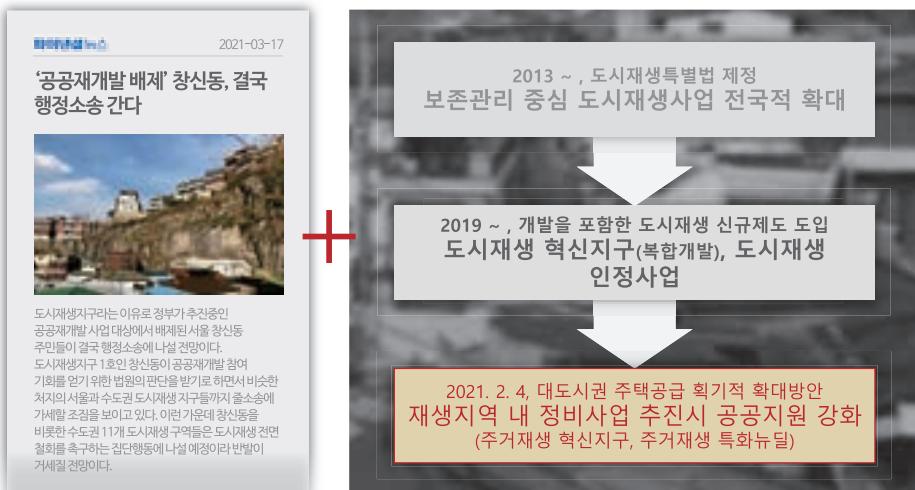
[ '2세대 도시재생(2021년 6월 발표)' ]

- 중앙정부 정책(2.4 대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환경 변화를 고려한 2세대 도시재생 전환
- 장소중심 통합정비로 도시재생 사업축 변경 (도시재생+개발·정비의 연계)
- 주택정비, 환경개선 중심 사업 추진
- 민간영역의 도시재생 참여 확대 및 활성화 기반 마련 등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22년 3월 발표) ]

- 방향 : 일상적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경제·산업적 지속가능성 제고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 6개 공간계획 : 보행 일상권 조성 /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3도심 기능 고도화) /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용도지역제 개편 등) / 지하철도 지하화 /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31 -

## 참고2. 서울 2세대 도시재생 주요내용

### [ 서울 2세대 도시재생 추진방향 전환 ]

- 도시재생의 사업 중심축 변경 ※ (기존) 보전관리 도시재생 → (변경) 장소중심 통합정비
- 민간영역의 도시재생 참여 확대 및 활성화기반 마련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정비,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 추진

### 기존 도시재생의 장점 강화와 한계점 개선



### [ 서울 2세대 도시재생 사업유형 개편1 ]

- 기존 도시재생 유형 4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
  - ⇒ 2개 유형 (중심지 특화재생, 주거지 재생)으로 간소화, 실행방식을 6가지로 다양화
- 유형별 사업목표
  - **주거지 재생** : 도시재생과 재개발, 모아주택 등 다양한 사업 기법을 적용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 **중심지 특화 재생** : 민간개발 활성화로 도심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 시가지 등 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 서울 2세대 도시재생 사업유형 개편2 ]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개발사업 통합 추진**
  - ⇒ 정부·서울시사업+도시재생 특별법 등 11개 관계법 사업 등 20개 사업 적용 가능



**서울 14개 재개발구역 주민들 "공공재개발 중단해야"**

서울시는 재개발을 중단하는 시장 정부를 확고화하는 한 해였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확장하는 한 해였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장을 침해하는 한 해였다.

**[단독]"길자해지" 못하는 서울시...백사마을 재개발 치연 위기**

서울시, 공사비 높은 주거재보전사업 체감액 놓고  
공사비 많아 문제로 사업비 충당 한 해  
주민들 사업 차단, 카풀장학 '노심초사'  
"서울시, 재안정 구상한들 줄지어, 송진에 철거"

**오세훈 직접 찾았던 신동기획 1호 '신풍1구역'... 주민 갈등에  
'잡음'**

공공도로·주차장 놓고 부동산값은 주민들 갑자기 낙하  
경악구현 "민족은 것은 것이 걸려... 배우자 이거라"

이재명·이낙연·이준석  
... 그 외  
서울은 서울이어야 하는 경쟁을 통해 원하는 삶이 있는 서울을 찾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10 대미래는 물론 지역 개발을 넘어 지역 주민 생활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신동기획 1호 세종특별자치시 우한동이란 단지에는 주민들은 백화점을 살피며 아름다워 아름답고 고리가 링동이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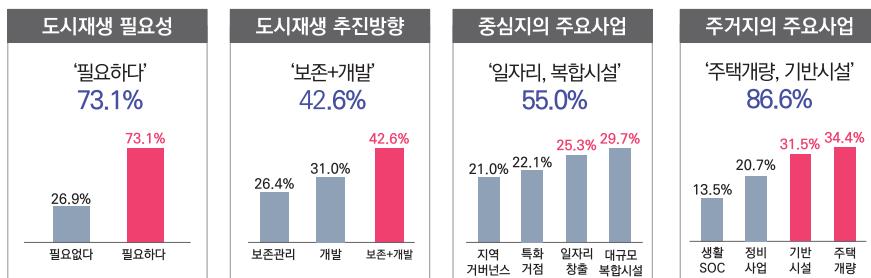
그 다음은 서울이라는 경쟁으로 서울이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주민 고리를 아름한 새라는 지난 겨울 서울 친환경 경영에 고리를 걸었다. 이재현 신동기획 1호 세종특별자치시 우한동 서울이라는 경쟁을 넘어서는 경쟁은 거리에, 풍자마루으로 점철된 구름아래에서 거리마다 고리를 걸어주는 경쟁이다. 그 다음은 서울이라는 경쟁이다.

## 서울 도시재생의 과제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시민의 도시재생사업 지속 필요성 공감 약 73%

도시재생의 지속 추진에 대한 서울시민 니즈 확인, 도시재생+정비사업 연계 필요성 인식 확인



\* 자료 참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관련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중 (응답 : 2,000명 / 설문기간 : 2021.04.28.-05.04.)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마중물 사업 기간은 마중물일 뿐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계획과 실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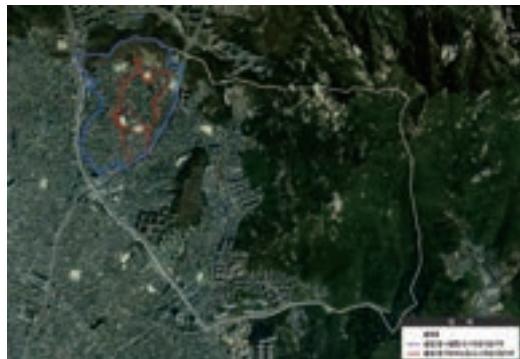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해제에 대한 근거는 전무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각종 후속사업을 위한 초석에 불과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종료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해제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 후 지역 공동체 회복, 물리적 환경개선 등 필요한 연계사업을 모색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에 매칭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간 (4~5년) 내 공동체회복 ~ 주민자생조직(마을관리협동조합, CRC등)의 운영 안정화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서울의 도시재생 현장의 인식과 기대

##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오려서 사업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방식 면 중심적 사업 → 점 단위 사업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생활권자는 도시재생사업 결과에 대한 영향이 없는가?
-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과정에는 구역계 이내의 주민만이 참여하는가? 생활권자는 활성화지역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음
- 지역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점(SPOT)-지점(SPOT) 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가?
-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관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

## 서울 도시재생의 향후 과제

## 비정규직 코디네이터를 양산하고 소비 인적자원 양성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관부조관				
급여비준	본사(대표에게) 1주(근무자) 퇴직 복지 혜택 혜택			
근무형태	설정된 근무 형태(근무 형태)			
급여비준	제한금액(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에 따라 면제 가능			
근무형태	도시재생위원회(도시재생현장) 1주(근무자) 퇴직 혜택(75~125%)			
부록부록	국민행복, 고용부처, 산체부처, 주당부처(부처명)			
증명	제공 협회 및 조사기관의 가능			

급여	직급	연령	교부기준(시간)	교부처
설정된 근무 형태 설정된 근무 형태	1주(근무자) 1주(근무자)	75~125%	주간제 설정된 근무 형태 설정된 근무 형태 설정된 근무 형태 설정된 근무 형태	국민행복 고용부처 산체부처 주당부처(부처명)

### 서울 도시재생의 향후 과제

##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기금의 설치를 통해 융자와 보조 확대 필요



현행 도시재생기금의 활용방식은 민간부문의 초기참여 유도에는 한계발생 → 민간부문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모색 필요

감사합니다.